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심리 속도전

대법 전원합의체, 오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

민주, 속행에 “이례적으로 빨라…공정 재판 촉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4일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추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된 직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경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취소 결정) 당시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라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선 앞두고 광주교육 4대 정책 제안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교육 의무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23일 오전 광주교육청에서 제21대 대선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오월 정신은 이제 우리 모두의 교과서”라며 “1987년 민주주의의 외침과 2017년 촛불혁명, 2024년 빛의 혁명은 5·18 정신을 품은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AI(인공지능)·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

육·‘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 교육·‘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 교육’ 정책도 제시했다.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핵심은 AI·미래모빌리티 등 광주 5대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육성, 고등학교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이다. 지역 인프라 발달에 발 맞춰 첨단산업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전형 기술인재를 양성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의 일환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교직원·학부모를 위한 정신건강 통합지원기관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도 제안했다.

/김도기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종류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를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법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출마론에 침묵하는 한 대행

최근 군 방문 등 광폭 행보

6·3대선을 40여일 앞둔 23일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론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추대론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연이은 광폭 행보도 대선 출마 전장에 무게를 더한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했다. 한 대행의 군부대 방문은 지난 1일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군 시설에 나선 것이다.

한 대행의 이번 한미연합사 방문은 미국과의 관계·통상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보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한 대행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행보에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5일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에는 울산 HD 현대중공업 공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는 식당을 격려 방문하고, ‘천원백반’을 팔고 있는 식당에 식재료값을 선결제한 것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출마를 염두에 둔 민생행보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이버 선거 범죄 ‘꼼짝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1일 앞둔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관계자들이 허위사실 공표·비방, 딥페이크 선거운동 등 사이버 선거 범죄

행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민주 ‘더 센’ 내란 특검 재발의…김전희·명태균 특검도 다시

세 번째 추진…이르면 이번주 재발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란 특검을 이르면 이번 주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와 더불어 구 여권을 겨냥한 특검을 돌아볼리며 대선 정국에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뽄뽄 뽄뽄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을 가치중립적인 하나

의 법적 수단이라며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고, 한덕수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란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논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정화화를 소망하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 대상 범위와 수사 인력, 기간 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를 40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로 길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등에 있어 보다 확장적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을 추진하면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도 두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함께 김전희·명태균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하하면서도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여부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을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김경수 “‘호남 소외 없어야’ 주문 많아”

“헌법에 5·18정신 수록해야…편법에 법적 처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호남 지역 분열로부터) 대선이 끝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지원에 걸맞는 대접이나 대우를 받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는 홀대론·소외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호남에서 만난) 시민·당원들께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라는 물음에 “경선 결과가 나오면 후보들이 한 팀이 돼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날 전북·광주 호남을 찾은 김 후보는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첫 번째 과제가 이번 계엄을 막게 된 가장 결정적인 힘인 5·18 광주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전문을 수록하고, 5·18을 편법하는 형태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해 나가

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5·18이 대한민국 의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가장 근본적 정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성’ 공약을 놓고는 “17개 시도 단위로는 더 이상 지역 균형 발전은 어렵다”며 “메가시티별 지방정부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지역민들과 함께 세운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장님이 예산 때만 되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예산 한 톨 더 배정해달라고 발이 닳도록 구걸하고 다니지 않나”라며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저는 ‘구걸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2차 경선 시동…여론전 돌입

김문수·홍준표 “내가 1등” 안철수·한동훈 “탄핵의 강 건너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캠프는 23일 2차 경선 첫날 당심과 민심을 얻기 위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제각각 1위를 차지하면서 정책 발표와 지지선언을 통해 선두권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민심을 내세워 반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조대연(고려대)·김경원(세종대)·김용호(전 인하대) 교수 등 전문가 136명이 참여한 싱크탱크 ‘김문수 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김 후보의 정책과 공약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책임지는 바로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김문수”라고 힘을 보탤다.

홍준표 후보도 전현직 의원과 원의 당협위원장,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선대위 명단을 공개

하며 기세 잡기에 나섰다. 2차 경선에서 51% 지지를 확보해 3차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에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향해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밝혔다.

2차 경선은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한동훈 후보,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홍준표 후보 2대 2 구도로 치러진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민심을 공략했다. 한 후보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제는 우리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의 의지로서 모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